

# 공유경제의 담론정치: 정부와 지자체 정책보고서의 비판적 담론분석\*

류웅재\*\*

## | 국문요약 |

이 글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공유경제의 정치경제학과 이를 둘러싼 담론정치에 대해 심층적이며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있다. 특히 일련의 정책보고서를 중심으로 최근 한국 사회에서 몇 가지 구체적 사례와 쟁점을 둘러싸고 생성, 접합, 경합 등의 과정을 거치며 재구성되거나 굴절되고 있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다기한 언술들을 소개하고 이를 중층적으로 독해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후기자본주의를 유지하거나 추동하는 정상성과 통치를 매개하는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언술들을 통해 확산, 변형, 그리고 자연화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탐문하고, 나아가 이에 관한 바람직한 사회적 상상과 대항적 합리성이 구축되는 양상과 가능성을 성찰적으로 조망하는데 유용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핵심어: 공유경제, 통치성, 정책담론, 담론정치, 비판적담론분석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800000003096).

\*\*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wjryoo@hanyang.ac.kr

## I. 들어가며

오늘날 세계는 2019년 말 중국 허베이성 우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된 이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나듯 유례없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일례로 이러한 글로벌 팬데믹(global pandemic)의 심각성은 단순한 정치적 의제나 수사(rhetoric)를 넘어 뉴노멀(new normal)과 언택트(untact) 사회의 도래를 불가피한 일상으로 만들었다. 특히, 일국 층위의 제도적 개입이나 통제의 범주를 넘어서는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측면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데, 많은 국가들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단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것이 그중 하나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시대적 화두로 부상한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융합하는 O2O(Online to Offline) 융합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제품의 경제에서 데이터와 서비스가 순환하는 융합 경제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 물질로 이루어진 소유의 세상과 정보로 이루어진 공유의 세상이 융합하는 확장된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4차 산업혁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맥에서 새로운 자본주의 플랫폼이자 경제의 한 형태로 부상하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해 심도 있는 학술적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이민화 2016; 문정우 2019).

공유경제는 오늘날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 과거부터 존재해왔다. 한국의 '두레'와 유럽의 '길드' 등에서 오늘날의 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공유를 추구해왔다. 과거 공유지가 기술적 한계로 유토 피아적 이상에 머물렀던 반면, 오늘날 정보의 세계에서는 한계비용의 제로화로 공유가 지배적인 원칙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일례로 위키피디아, 지식in, 오픈소스 등 수많은 정보 공유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2001년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는 오픈소스 운동을 주창하면서 지식의 공유는 혁신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선언했다. 또한 개방 플랫폼의 등장으로 공유 비용이 제로화되면서 제레미 리프킨은 '한계비용 제로 사회'를 주창하게 되었다. 그는 공유경제가 기존 완전 경쟁시장의 구조를 변화시

킬 수 있을 것이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공유경제는 오프라인 경제 규모의 5퍼센트 미만인 온라인 세상에 국한되고 있다. 즉, 이 새로운 경제 형태에 관해 ‘부업을 합리화하기 위한 허울 좋은 논리’라는 의견과 ‘소유만 주장하는 세상이 뭐가 그리 좋은가’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이민화 2016; 조희정 2017, 73).

한국 사회에서도 2010년대 말부터 많은 이들이 공유 플랫폼 기술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플랫폼 기술은 직접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체질 변화와 연결돼 있다. 일명 공유(共有)경제가 그것인데 때로 이는 ‘플랫폼경제’로 명명되기도 한다. 정거장과 같은 플랫폼에서 유무형의 자산과 물건의 공유 행위가 이뤄지고 성사되기 때문이다. 공유경제 아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임대하는 브로커들은 사람, 자원, 노동 등을 적재적소에 짝을 찾아 배치하고 맺어주면서, 신종 지대 이윤을 발생시킨다. 일례로 우버(Uber, 자동차)나 에어비앤비(Airbnb, 숙박) 등 공유경제의 성공 실험을 지켜보면서, 제레미 리프킨 등 사회학자나 도시 혁신가들은 ‘반(反)자본주의’의 도래를 외쳤다. 이들이 열광하는 근거는 공유 행위를 통해 시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회 혁신을 이루고 사회 민주주의까지 획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무늬만 혁신의 생태계가 지배적 시장자본의 논리로 포획되고 지대 이윤이 브로커에 독점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줄곧 무시하고 있다(이광석 2017).

이러한 문맥에서 공유경제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를 들 수 있다. 그는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경제학자로 공유경제를 ‘이윤의 부스러기를 나눠 먹는 가혹한 노동 형태’라고 평가하며 쉬어야 하는 시간에 많지도 않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도록 내몰리는 추세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조희정 2017, 72). 그러므로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긍정적 전망들, 특히 이와 밀접하게 연동하는 공유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정치에 관해 심층적이고 비판적으로 독해함으로써 이 개념의 가능성과 한계, 문제적 요소들을 적절하게 진단하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과 학술적 논의에 공헌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그간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통치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탐색한 학술적 논의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사회학과 문화연구 등의 분야에서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통치성이라는 문맥 하 자기계발이나 힐링, 소비문화 등 개인들의 주체화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주로 푸코(Michel Foucault)의 통치성(governmentality) 이론을 기반으로 해 논의되어 온 자기계발을 다룬 일련의 작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합리성’, ‘지식기반경제’, ‘경쟁’, ‘혁신’, ‘자기실현’, ‘자기지배(self-governing),’ 경제적인 삶의 심화된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등의 핵심어군을 내장한 담론구성체들이 발휘하는 이데올로기 효과 및 훈육 등의 복합적인 권력 작용이 빚어낸 상황을 새로운 분석의 영역으로 삼아 왔다(송동욱·이기형 2017, 34). 이 복합적인 문제들은 한국 사회의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성격변화를 자기관리와 결집된 능력의 배양, 그리고 ‘자기계발의 의지’와 같은, 과거와는 차별화된 사회적 에토스의 확산과 이러한 지배적인 규범과 습속의 실현을 두고 분투하는 청년주체들의 활동상을 주로 담론적 진단으로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서동진 2010; 송동욱·이기형 2017, 34).

반면, 기존의 연구들은 다소 국지적이거나 단선적인 미디어 효과에 분석의 강조점을 두거나, 미디어가 생성하는 일상적이며 미시적 현상들 및 대중문화를 둘러싼 개별 학제의 제한적 관점에서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정치 경제적, 사회 문화적 현상들, 그리고 이의 수용과 통치성에 주목한 측면이 강하다. 때문에 이를 확장해 국가를 포함하는 글로벌 경제와 문화 등 보다 거시적이며 구조적 층위에서 이러한 담론의 확산에 대해 비판적 정치경제학이나 역사적으로 탐문한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제도와 이것이 생성하는 구조적 층위의 일상화나 미학화, 주체 형성 등을 촉진하거나 매개하는 국가와 지자체 등 정책 행위자의 담론 구성자적 역할은 간과되거나 축소된 경향이 있어 이를 보다 깊이 있게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이 글은 그간 축적된 국내외 연구동향의 현황과 성과를 토대

로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문맥에서 특히 공유경제를 둘러싼 담론정치에 관해 심층적이며 비판적으로 독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이데올로기가 사회나 개인의 일상에 착근하거나 자연화(naturalization)하는 과정을 추적하고, 동시에 이에 관한 성찰과 대항적 합리성이 구축되는 과정에 관해 유연하면서도 중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후기자본주의의 경제 형태를 둘러싼 다기한 담론과 이것들이 매개하는 정상성, 사회적 상상, 나아가 복잡한 문화정치의 양상과 연관된 담론 지형을 연계적,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독해함으로써 관련 학술 논의의 지평과 외연을 확장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 II. 공유경제의 비판적 담론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글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생성, 접합, 경합 등의 과정을 거치며 재구성되거나 굴절되고 있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다기한 언술들을 소개하고 독해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후기자본주의를 유지하거나 추동하는 정상성을 매개하는 언어, 혹은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언술들을 통해 확산, 변형, 그리고 자연화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탐문하고, 나아가 이에 관한 바람직한 사회적 상상과 대항적 합리성이 구축되는 양상과 가능성을 성찰적으로 조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작업은 후기자본주의의 경제 형태를 둘러싼 문화정치의 양상과 복잡한 담론 지형을 심층적으로 독해함으로써 관련 학술 논의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담론과 관련된 사회과학 이론, 텍스트 및 담론 분석을 유연하게 활용해 특정한 구조나 제도, 경제적 변화가 사회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 및 접합, 또는 절충 및 전유되는지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지면이 제한된 논문이라는 형식의 특성상 공유경제에 관한 모든 논의를 포괄적이며 계보학적으로 일별하고 다루는 것은 이 글의 의도를 넘어선다. 다만, 이 글은 우리 사회에서 최근 공유경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

는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이들이 미디어와 정책담론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거나 매개되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이는 특정한 경제 현상이 그 자체로 고정불변의 실체성을 갖거나 사회적 논의를 넘어서는 초월성을 갖지 않는 것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장하기도 한다. 나아가 경험적 시간과 공간에서 최적의 사회적 설명력을 획득하거나 빈틈없이 정교해 보이는 기술적, 제도적 층위의 논의일지라도 이것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나 사회적 무의식을 반영한다는 견지에서 공유경제 관련 미디어와 정책담론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일은 상당한 시의성을 지닌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란 시대적 화두에 직면해 이를 견인하는 하위 기술적 예술의 하나로 공유경제의 담론 구성체로서의 성격을 분석하는 일은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미디어 담론은 한 사회와 구성원들의 ‘사회적 상상(social imaginary)’<sup>1)</sup>을 특정한 방식으로 매개하거나 재생산한다(이선민·이상길 2015, 8). 미디어 담론은 고도로 전문화되고 기술적인 언어들이 사회적 힘을 획득하고 정책이나 제도로 반영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매개자, 혹은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물론 여기에 그 내용적 측면을 제공하는 것은 학술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 단행본 등 전문성을 지닌 작업들이다. 언론 생산자들의 제도적, 구조적, 혹은 인식론적 한계로 인해 관련 사안의 내용들을 선별과 배제, 접합과 전유, 취사선택을 통해 대중과 매개할 때 이의 질료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문성을 담보한 학술적 작업들이다.

---

1)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는 이를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실존에 대해 상상하는 방식,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방식, 사람들 사이에서 일이 돌아가는 방식, 통상 충족되곤 하는 기대들, 그리고 그러한 기대들의 아래에 놓인 심층의 규범적 개념과 이미지로 설명한다.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상상하는 방식은 주로 이미지와 이야기, 전설 등 일정한 담론적 구조와 과정을 수반하며 이는 허위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나 유물론적 환원론과는 일정한 거리(Taylor 2010, 43, 309)를 두는 적극적 수행의 소산이다. 이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서로 어울리고 생활하면서 그 방식과 결과에 대해 품게 되는 규범적인 기대, 믿음, 이미지 등의 총화이지만, 불분명하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며 경계가 불확정적이라는 점에서 이론과는 다른 것이며, 사회적 실천의 중요한 요소를 구성한다(이선민·이상길 2015, 9-10).

이러한 학술적 작업들이 선택, 강조, 혹은 배제함으로써 범주화하고 지속 가능한 유형을 생산하면 이를 활용하거나 경유해 미디어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는 주조자의 역할을 담당한다(Schudson 2011). 그러므로 공유경제와 관련해 대중적 미디어 담론을 가능하게 하고, 이의 범주나 정도를 확정하며, 발화되어질 것과 발화의 공간에서 배제되는, 즉 가능태로서만 남는 언술들을 선택하는 것은 주로 미디어 생산자와 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수용자의 몫이지만, 동시에 이에 유용한 재료를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학술 담론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대중적 미디어 담론을 구성하거나 사회적 상상을 매개하는 재료로서 국가와 지자체, 혹은 산하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기존의 텍스트분석이나 담론분석의 정형화한 절차와 분석단위, 즉, 대상의 선정과 유목화를 통한 구조화된 분석을 시도하기보다는 상기한 미디어 담론, 즉 언론보도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연구보고서, 정책 자료 등 포괄적인 증거를 중층적이고 연계적이면서 유연하게 분석할 것이다.<sup>2)</sup> 이는 특정 정치 주체나 제도로 생성되는 유력한 담론을 통해 사물이나 사건, 혹은 사안을 보는 입장과 시각이 만들어지며, 특정한 담론의 영향으로 그러한 사안에 대한 ‘담론화된 진실’과 현실이 형성(이기형 2006)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부분적으로 페어클로우(Norman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CDA: 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차용해 텍스트와 담론, 사회적 영역의 언술과 실천, 즉 각각의 층위에서 지향하는 주된 의미화 작용에 관해 다룰 것이다. 비판적 담론분석은 텍스

---

2) 이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언론보도와 국가와 지자체 산하 연구소의 정책 보고서를 선정한 이유는 이것이 공유경제를 둘러싼 유력하고 유의미한 사회적 상상 및 이것이 언어적으로 발화되고 유통되는 담론 구성체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술 논문이나 단행본 등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창출하지만, 이 글은 논문이라는 지면의 제약, 분석과 논의의 한계를 고려해 분석의 대상을 언론보도와 연구보고서로 한정했다. 특히 정책 보고서는 언론보도나 학술논문, 관련 분야의 단행본 등의 논의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중요한 실증적 자료나 분석 과정에서 원천 소스의 성격이 강한 이유에서 공유경제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담론 생성의 내용과 추이, 생성과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트에 대한 형태학적, 언어학적 분석뿐만 아니라 이것이 구체적인 맥락을 통해 사회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획득하는 이데올로기적 권력 효과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런 의미에서 비판적 담론분석은 사회 문제에 주목하는 해석적이고 설명적인 분석이다(홍성현·류용재 2013; Fairclough & Wodak 1997).

페어클로우(Fairclough)는 담론과 사회 문화적 차원과의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텍스트적 실천(textual practice)', '담론적 실천(discourse practice)',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의 세 단계 접근 방법을 제안하였다. '텍스트적 실천'은 종래의 언어학, 혹은 사회언어학에서 주로 행해온 미시적 분석으로 '어휘', '문법', '결합', '텍스트 구조'라는 네 가지 범주로 조직된다. '담론적 실천'은 담론을 생산하고 해석하는 실천인 동시에, 담론의 질서 내에서 담론들 간의 연관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언어학적 분석보다는 상호 텍스트성 및 상호 담론성이 분석의 핵심이 된다. 그리고 '사회적 실천'에서는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텍스트적 실천이 담론적 실천으로의 확장을 통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를 어떻게 구성하고 재구조화하는지 분석한다. 그러므로 비판적 담론분석은 텍스트적 실천과 담론적 실천, 그리고 사회적 실천의 통합을 통해 텍스트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구조에 대한 거시적 접근을 연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박해광 2007; 신진욱 2011; 홍성현·류용재 2013, 22 재인용; Fairclough 1992; 1995a; 1995b; Fairclough & Wodak 1997; Wodak & Meyer 2001; Van Dijk 2008).

이처럼 비판적 담론분석은 일련의 공통된 방법적 규칙이나 기술, 원리를 뜻하지는 않으며, '담론분석을 통한 사회비판'이라는 실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느슨한 공통의 관심과 지향을 공유하는 접근, 혹은 학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담론분석에서는 방법론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통일된 절차와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따르기보다는, 연구대상에 대한 간학제적이며 비판적 기여를 위해 필요한 분석방법을 연구자가 독창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론적 이슈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전술한 페어클로우가 제시한 담론분석의 틀과 개념들을 기반으로 하지

만 이를 도식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적절하게 활용하고 기존에 행해진 연구들의 다양한 분석 틀과 개념들을 참고하여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신진욱 2011; 김선기 2016; 이오현 2017, 42 재인용)하게 유연하게 변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과 분석의 효율성을 충족하기 위해 공유경제 관련 개별 텍스트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보다 이것들이 지향하는 거시적 목표와 이를 추동하기 위한 주요 논의들, 이것들의 의미와 특성, 그리고 강조점의 요약과 기술에 분석의 주안점을 두었다. 일례로 담론적 실천으로서의 상호텍스트적 분석의 목표는 텍스트 내에 혼재하거나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장르와 담론들을 실타래를 풀어내듯이 밝혀내는 데 있는데, 이를 위해 수사학적 어휘와 문법, 문장구조 등의 언어적 실천 외에 이들의 상호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전체 텍스트 안에서 어떤 의미 단위의 담론구조를 생성하는지 분석(홍성현·류용재 2013)한다. 또한 상징들의 특정한 배열과 그것이 산출하는 의미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기게끔 만드는 다양한 언어적 테크놀로지에 주목하고 이의 한 예로 특정 단어나 단어군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자주 쓰기(overwording)’에 관한 분석에 주안점을 둔다(신진욱 2011, 29-30; Fairclough 2001, 97-98). 이러한 분석 틀과 전략에 기반해 이 연구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정부와 지자체 산하 연구소에서 출간된 보고서,<sup>3)</sup> 이것들이 상호작용하는 미디어 담론들을 상기한 비판적 담론분석의 개념과 틀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하나의 유의미한 이해와 분석의 틀로 유연하게 활용하려 하였다.<sup>4)</sup>

---

3) 분석대상을 정부와 지자체 산하 연구소에서 출간된 보고서로 한정된 이유는 우선 학술 논문이라는 제한된 지면에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모든 제도적, 정책적, 사회적 담론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분석적 측면의 한계에 기인한다. 동시에 이 보고서들이 지니는 시의성, 대표성, 사회적 영향력 등의 차원에서 언론과 학술 및 정책 담론을 연계적으로 포괄·횡단하며 한국 사회에서 생성 및 변화하는 관련 담론의 분석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수준의 유효성을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4) 이는 페어클로우나 반다이크(Teun Van Dijk)의 비판적 담론분석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기한 맥락과 변화무쌍한 사회현상에 공식처럼 대입하거나 적용할 때의 문제에 대한 연구자의 경험과 불만족에 기인한다.

### III. 공유경제 담론의 기원, 전개, 사례

우선 공유경제(sharing economy)와 관련된 사전적 정의는 이미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협력 소비경제로, 이는 대량생산체제의 소유 개념과 대비된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로 저성장, 취업난, 가계소득 저하 등 사회문제가 부상하면서 과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자는 인식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문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공유하자는 사회적 인식도 증가하였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IT기술의 발전은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편리하게 만들어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였다(두산백과 2019/03/07).<sup>5)</sup> 물론 이러한 공유경제의 개념과 형태는 최근에 갑작스럽게 부상한 것은 아니고, 과거 원시 부족사회 이래로 각 지역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계승 및 지속되어 온 것이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오늘날 IT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제도나 정책의 내부로 편입되며 구체화·가시화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공유경제 관련 담론들은 커먼즈(Commons)와 더불어 셰어링(sharing)의 개념으로 그 어의가 포괄적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양자가 공유경제라는 언술로 통합되면서 보편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 예로 미디어가 매개하는 공유경제를 둘러싼 언술들은 국가의 거시적 산업 정책이나 관련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일상의 재기발랄한 문화적 실천으로도 일종의 정상성을 획득한다. 가령, 과거 소유의 개념이 강했던 집과 차가 셰어하우스(공동 주거)나 카셰어링(자동차 공유) 등의 형태로 공동 소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이른바 ‘공유 경제’의 확산은 단순한 마케팅이나 트렌드를 넘어 거부할 수 없는 전 지구적 추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공유하는 품목 또한 다양화되어 값비싼 악기부터 정장, 아이 옷, 집밥, 책, 공공시설

5) [네이버 지식백과] 공유경제[Sharing Economy](두산백과).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79580&cid=40942&categoryId=31812>(최종검색일: 2020/01/05).

유희공간, 옥상, 주차장, 림세어링, 도시민박, 도시텃밭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특히 공간의 공유는 국내와 전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공유경제의 분야로 빠른 확산 추세를 보이며 매년 80% 이상 성장하는 ‘메가트렌드’ 시장이기도 하다(최용성·이정진 2014; 한겨레 2014/12/30).

이는 한국 사회에 국한되거나 그 특수성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고 현대사회의 정치 경제 시스템과 실천에서 드러나는 현대성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한다. 한 예로, 이는 기존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이던 ‘시민’ 개념의 ‘소비자’ 개념으로의 전환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백화점 같은 소비 공간에서 쇼핑과 소비를 하는 구성원들은 바깥세상에서 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구했지만 얻지 못했던 것들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재화뿐 아니라,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다는 위안의 감정, 안락한 소속감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이 지적하듯 차이의 부재, ‘우리는 모두 같다’는 느낌이나 가정은 삶의 무대가 불확정적이고 복수화되며 다성화되는 것과 비례해 증가하는 ‘공동체’ 개념의 궁극적 의미이며 공동체가 지닌 매력의 원인이다. ‘공동체’란 함께 함, 그것도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아주 유사한 것들이 그야말로 똑같은 유형의 사람들 간의 함께 함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는 숙제가 아니라 주어진 것으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기도 전에 완전하게 주어지는 함께 함이다. 이런 면에서 공동체적 연대의 신화는 일종의 정화의식이 된다(바우만 2010, 162-163).

유사한 문맥에서 공유경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 중 기존의 신자유주의 관련 담론구성체들에서 친숙하게 발견되는 탈규제와 관련된 논의를 들 수 있다. 일례로 2017년 서울시는 카풀(carpool) 앱을 운영하는 한 차량공유 업체가 서비스 시간을 24시간 체제로 확대해 출퇴근 시간에만 일반 승용차의 유료 영업을 허용하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심야 버스 공유서비스를 하는 콜버스로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관해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과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진상훈 2017). 그렇지만 이처럼 탈규제를 옹호하는 논의에 대해 카가

오와 같은 공유플랫폼 경제는 노동의 파편화와 위험의 외주화에 일조하는 측면이 있으며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을 플랫폼 업자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하는 비판, 특히 플랫폼 내의 소유와 통제가 개인에게 집중되는 모습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유경중 2018)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승차공유 서비스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기존 사업자들과의 갈등에 발목이 잡혔다는 시각을 제기한다. 일례로 승차 공유 서비스(카풀)를 제공하는 ‘폴리스’는 2018년 6월 기존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직원 70퍼센트를 해고하면서 사실상 서비스를 접었다. 폴리스 외에 국내 대표적인 승차공유 서비스들도 하나둘 서비스를 접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버스 공유 스타트업 ‘콜버스’는 전세버스 예약서비스 업체로 바뀌었고, 카풀 3위 업체였던 ‘티티카카’는 서비스 출시 5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2016년 5월 창업한 폴리스는 약 1년 만에 회원 수 75만 명을 확보하고, 누적 이용 건수도 약 370만 건에 이르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후 네이버와 에스케이 등에서 총 220억 원을 투자 받기도 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곤 이들의 영업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운수법)의 벽에 부딪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나서서 규제 개선안을 찾자 했지만 “차량 공유 사업은 불법”이라는 택시 기사들의 반대가 높아지면서 논의는 좀처럼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환경에서 ‘우버’, ‘에어비앤비’ 등 세계적인 공유경제 기업들도 유독 국내시장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지 2년도 안 된, 2015년 3월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다. ‘에어비앤비’가 불법인 공유 숙박업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공유 숙박업을 따로 관할하는 법이 없다. 이 때문에 국내 도심 지역의 에어비앤비는 도시민박업 규정을 적용받아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다(신지민 2018).

공유경제와 관련한 또 하나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이것이 2000년대 말 전 지구적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유럽을 위시한 여러 지역에서 투기적 금융자본 위주의 신자유주의의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 형태이자 실천으로 부상하고 있는 커먼즈(communs) 운동에 관한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투기적 도시개발에 맞서 ‘도시에 대한 모든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로 공유지 운동과 같은 도시 커먼즈 실험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커먼즈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함의를 안겨줄 수 있으며, 나아가 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서서히 발아하고 있다. 즉,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공공장소(public space)가 ‘모두에게 열려있다(open to)’는 뜻이라면 커먼즈(common)는 ‘모두에게 속해있다(belong to)’는 개념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공유경제는 일반적으로 공유재, 공유지, 공동자원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커먼즈 대신 유희자원을 같이 나누어 쓰는 ‘공용’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셰어링(sharing)은 사적 소유하에 남는 자원을 합리적 소비의 차원에서 나눠 쓰는 것을 말하며 이는 커먼즈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유경종 2018)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트렌드는 오늘날 일상 속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숙박, 자동차, 고가 물품 등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최근에는 경험이나 재능, 가치 등을 타인과 공유하는 업체들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가 2010년 8억 5천만 달러에서 2015년 150억 달러로 5년 사이 17.6배나 성장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에서 공유경제는 최근 사무실을 공유하는 공유오피스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대신 합리적으로 사용하자는 ‘이익중심’의 공유경제이다. 비싼 가전, 자동차, 설비 등을 비용을 받고 사용권을 빌려주는 렌탈(rental)산업, 고가의 자동차나 주택을 공유하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제조업체 중심의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방식(B2C)이 주를 이룬다. 두 번째는 경제적 합리성 너머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유이다. 만남이라는 가치를 위해 남는 부엌과 식탁이 활용되거나, 인생샷 찍는 법, 항공권 싸게 끊는 법, 문과생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셀프로 머리 드라이 하는 법 등 배우고 싶지만 현실에선 배울 곳을 찾기 힘든 다양한 분야의 재능 등 비싼 자산이 아닌 시간이나 경험, 삶의 지혜 등을 공유한다. 이는 개인 간의 거래 방식(P2P)이 주를 이룬다(신지민 2018).

이처럼 공유경제는 장기 불황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상에서의 구체적 실천이라는 의미에서 집, 자동차, 오피스뿐 아니라 옷, 부엌, 재능 등을 공유하는 행위는 더 이상 소유할 필요가 없고 함께 '나눠 쓰면' 된다는 대안적 가치를 앞세워 미래의 경제가 나아갈 대안적 경제 실천이자 제도로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한쪽에선 공유경제를 내세웠던 업체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애초의 실험적, 창의적 사업의 형태를 넘어 다시 대규모 자본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돈 대신 가치를 추구해 오히려 돈을 만들어내는 방식의 공유경제의 취지가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이나 메커니즘(mechanism)에 흡수, 합병, 혹은 전유되면서 기존의 독과점이나 경쟁 논리 등의 문제와 전철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이미 여러 학자들이 조금씩 다른 방식과 목소리이지만 유사한 어조로 우려한 바이다. 일례로 리프킨은 새로운 경제 체제와 시장 도구의 힘이 오늘날 개인 생활을 조직하고 사회적 담론을 재구축하는 전방위적 환경을 조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역설적이나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전제로 하며 이것이 사회적 존재의 가장 근본적 범주까지도 뜯어고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는 기업 마케팅의 세계에서 특정 분야에 대해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새로운 유형의 취향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관심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관계망, 취향 공동체에 상업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덜 중요하다.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것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를 구성하는 무수한 네트워크에 연결된다는 의미이며, 그런 문맥에서 구독자 회원, 클라이언트가 된다는 것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해진다. 앞으로 사람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접속이 되는 시대가 온다. 동시에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상업적 관계로 변모하고 이는 혈연, 이웃, 문화적 취향의 공유, 종교적 결사, 민족의식, 형제애, 시민의식에 바탕을 둔 관계를 침식하고 그러한 사회의 정경을 변모시킨다(리프킨 2001, 161-162, 165, 167).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시대에 사람들 간의 협력을 통해 물품

을 교환,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시대의 등장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필요로 한다. 이는 기존의 양극화한 이념, 예컨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시각과 사유, 그리고 경제 패러다임을 요청하고 이는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 등으로 개념화되기도 한다. 즉, ‘소유하지 말고 공유하자(Not Have, So Share)’는 논리는 공유 경제 시민기술의 핵심 주장인데, 이는 전술한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소유 모델에 대한 회의가 발생했고, 사람의 가치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면서 적은 비용으로 더 큰 가치를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성장했다. 또한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로 인해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기존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분별없는 소비주의를 성찰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더불어 대도시에서는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가까운 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끼리 서비스를 공유하는 생각도 공유경제와 관련한 사회적 담론과 시민기술의 발전에 기여했다(조희정 2017, 68).

반면, 이러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상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전망, 바꿔 말해 상호연결성이 급속히 높아지는 데서 빚어지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인식이 부상하기도 한다. 즉, 우리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연결과잉 현상의 결과로 세상의 기존 질서가 상당 부분 급진적으로 해체되고 있음을 목격하기도 한다. 가령, 인터넷을 빼놓고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긴 어렵다. 물론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신용 위기는 틀림없이 어느 정도의 불경기를 초래했을 것이고 여기에서 인터넷의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인터넷이 현재의 위기를 더욱 치명적으로 키우고 확산시켰다는 사실을 이해하거나 유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정보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뉴스와 소문을 실시간으로 생산하고 전파해 주체할 수 없는 탐욕과 과도한 공포를 유례없는 속도로 생성함으로써 이른바 사고의 전염도 퍼뜨렸기 때문이다(데이비드우 2011, 15-17).

이러한 현대성의 변화를 바꾸만은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에 근거해 ‘액체성’과 ‘유동성’이라는 흥미로운 언어로 포착한다. 가령, 유동하는 현대사회

와 삶 속에서 인간이 체험하는 다양한 부정적 경험들, 일례로 공포, 불안, 냉소, 불신, 상실감 등 현대성이 가진 특성들이 액체성, 혹은 유동성을 견지할 뿐 아니라, 그렇게 변모한 사회와 삶의 양상들과 상호작용하며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바우만은 이러한 현대성이 과거의 물리적이거나 구체적 장소성과 물성을 지닌 '건고'하거나 '딱딱한(solid)' 국면에서 '무정형'이거나 '유동하는(liquid)' 국면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한다. 바뀌 말해, 과거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구조나, 일상적인 일들과 용인될 만한 행동 양식이 반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제도들과 같은 사회적 형태들이 더 이상 제 모습을 안정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조건으로 변해 버린 것이 현대(성)의 특징 중 하나이다. 공유경제 또한 이러한 변화한 현대성을 반영하거나 이러한 시대상에서 잉태되고 자라난 경제 형태이자 사회 구조, 나아가 빠르게 일상화되고 있는 삶의 한 양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문맥에서 공유경제가 기존의 경제와 비교할 때 '착한 경제'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것이 일종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임을 간파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기실 공유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등장한 것이며, 산업의 특징상 남는 자원 활용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한 자원을 여러 명이 나눠 쓰다 보니 상호 간에 예의를 지키는 등 순기능이 결과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라는 진단도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공유경제를 '착한 경제'로만 이해할 경우, 전체 산업 중 일부만 인정하게 되어 산업 자체가 확장되거나 이윤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을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국내에 공유경제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계속 되고 있는데, 기존의 전통적 사업 영역과는 다른 규제와 제도를 만들어야만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신지민 2018).

최근 한국에서도 이러한 공유경제가 제도화되고 국가경제의 일부로 편입되는 일련의 움직임들도 가속화하고 있다. 일례로 카카오T, T맵택시, 타다 등 플랫폼을 모빌리티 업체들이 운송사업 제도권 내에서 정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사례를 들 수 있다. 물론 '타다'와 같은 직접적인 플랫폼 운송 업체는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야 하고 택시산업 종사자

의 복지를 위한 기여금을 내야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하기로 한 택시 제도 개편안이 발표됨으로써 관련 산업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박상영 2019). 이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기존 운송 산업 관련 규제를 철폐하거나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실제로 ‘타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승차 공유’라 주장하는 반면, 택시업계는 “앱(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서 불법 행위를 공유 혁신이라 포장한다고 비판해 왔다.”<sup>6)</sup> 학계에서는 공유경제를 개인의 유휴 자산을 활용한 경제활동이나 추가 소득으로 엄밀하게 해석하는데, 이러한 좁은 범주를 적용하면 ‘타다’는 공유경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타다’는 개인이 쓰지 않고 있는 자산을 타인과 함께 쓰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대규모 자본으로 차량을 구입해 영업하기 때문이다(박태희 2019).

즉, 공유경제는 공유와 공유지, 협업, 네트워크화된 사회적 협동을 기반으로 하고 이러한 인프라와 시민기술 및 수행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공동체적 가치에 관해서는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조희정 2017, 73). 동시에 공유경제의 상당 부분은 자본화한 독점적 네트워크 플랫폼이 포획하고 전유한 금전화 할 수 있는 무보수 활동들로 구성된다. 가령,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은 이전에는 상품화되지 않았던 유휴자원을 상품화한다. 이러한 플랫폼의 생산 구조의 이면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협력적 생산도, 합리적 거버넌스도 없고 플랫폼은 온전히 소유자가 통제하는 구조이다. 본질적으로 사용자 커뮤니티의 신뢰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플랫폼 소유자는 사용자 집단의 주목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네트워크에 투입되는 것들을 착취한다. 이러한 참여형 플랫폼을 소유하고 제어하는 위계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생산은 노조나 보험 등 안전장치가 부재한 불안정 노동의 확대 재생산을 통해 영구적인 프레카리아트(precarious+proletariat)를 만들어 내고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강화한다. 일례로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크라우

6) 2020년 3월초,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에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청와대가 선을 그은 셈이고 향후 타다는 영업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오원석 2020).

드 소싱 형태의 시장에서 자본은 노동 형태를 버리고 리스크(risk)를 프리랜서들에게 외주화한다. 이러한 공유지 부문은 불안정에 대처하는 연대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여전히 시장과 국가 부문으로 이끌린다. 국가는 공공 서비스와 연대 기능을 약화시키고 억압적인 기능을 할 뿐 아니라, 금융자본을 지원하는 일에 찬성한다(바우웬스 & 코스타키스 2018, 48-49, 56-57, 147).

#### IV. 공유경제 담론의 제도적 전유

공유경제와 관련한 국책 연구소나 지자체 산하 연구소의 연구보고서를 포함한 정책제언과 유사한 형식의 글들은 관련 주제를 둘러싼 사회적 상상과 여론을 탐문하고 이해하기에 유용한 텍스트로 기능한다. 국책 및 지자체 연구소는 전문 분야의 현안에 관한 이론 수립과 사회적 여론을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대학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입안 및 집행과 관련해 그 근거와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유포되는 사회적 담론의 전위이자, 정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크고 작은 행정 조직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대학에서 생산되는 이론이나 개념, 담론들과 비교할 때 보다 실제적이고 정무적인 성격을 노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보고서나 정책 보도 자료는 언론 기사의 훌륭한 원천 소스나 재료로 활용되며, 이것이 기사화되어 특정 현안에 관한 사회적 담론 구성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 산하 연구원에서 생산된 연구보고서의 공유경제 관련 담론의 유형과 논조, 내용과 기술방식을 분석하는 것은 이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생성 및 유포되는 지점과 확산되는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sup>7)</sup>

7) 이를 위해 이 글은 실증주의적 전통에서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과 같이 대상의 양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미디어 등에 의해 재구성된 정책 담론을 밝게 비추고

일례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출간된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2016)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과 규제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보고서는 보유자산을 활용한 개인 간(peer-to-peer) 거래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공유경제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거래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이며, 공유경제의 확산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구체적으로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2013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 3,350억 달러로 약 20배 증가해 전통적 대외시장 규모에 육박할 전망으로 주요 5개 공유경제 분야들은 P2P 펀딩 및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채용, 차량 및 교통 수단 공유, 음악과 동영상 스트리밍, 숙박 공유 등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라는 낙관적 언술들이 기업이나 금융 관련 연구소에서도 보고서의 형태로 양산되고 있다(김주환 2017, 3).

반면, 공유경제는 기존 산업과의 차이로 인해 많은 기대와 우려를 수반하는 동시에, 정부 제도의 적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sup>8)</sup>도 제기된다. 그러므로 최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리되지 않은 공유경제 관련 쟁점사항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

---

그 이면에서 작동하거나 숨겨진 다층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도출하고 표면화시키기에 적합한 텍스트를 선별하여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비판적 담론분석(CDA)은 언어와 텍스트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상식이나 믿음, 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되고, 담론이 역사적 과정, 또는 시간적 흐름 및 사건들과 연관되어 이해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 글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풍성한 정보를 제공하는 텍스트를 (재)배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Fairclough 1995b; Wodak 2001; Tonkiss 2012).

- 8) 분석대상인 일련의 정책 보고서들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비판적 논의들은 공유경제와 관련된 제도적 적용과 응용을 포함한 운용과 미래의 정책 방향성, 수행과 관련된 기술적 차원 등 절차나 과정적 차원에서의 그것이지, 이것이 생성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 이를테면 환경과 생태에 대한 그것을 부분적으로 전유하는 반면, 플랫폼 노동, 비정규직, 복지, 소비의 문제 등 중요한 사회적 현안들에 대한 거시적, 연계적, 총체적 맥락에서의 성찰적 논의와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이라 서두에 기술하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의 기대효과와 우려요인에 대한 이론적이며 실증적 분석을 통해, 공유경제의 기대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되 우려요인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도출(김민정·이화령·황순주 2016, 1-2)하는 것이 보고서의 목적이라 밝히고 있다.

연구보고서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공유경제는 신규거래 창출 및 경쟁 효과, 홍보·시장성 시험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 환경비용 저감효과 등의 다양한 기대효과와 기존거래 구축, 거래 및 사회적 위험이라는 우려요인을 함께 수반한다고 분석한다. 또한 공유경제는 우려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한다면 사회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제도적 접근방식이 요구되며, 분야마다 발전 현황 및 전망, 두드러지는 이슈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책방안의 마련에 있어서는 분야별 특성을 감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한다(김민정·이화령·황순주 2016, 2).

구체적 사례로, 보고서의 3장에서는 숙박공유(accommodation sharing)의 사례를 들어 공유경제의 우려요인 중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을 분석한다. 숙박공유를 통해 새로운 숙박 공급자가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숙박업자들은 이들이 기존 숙박업자들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으며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가져갈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일례로 숙박공유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플랫폼 에어비앤비의 경쟁 압력이 적절한 규제환경에서 정당한 경쟁을 통해 가해진 결과라면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을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것이나, 만약 숙박공유가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누린 결과라면 기존 숙박업자도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회후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다(김민정·이화령·황순주 2016, 7-8).

이를 위해 상업적 오·남용을 막고 거래량을 차별화하여 일시적인 숙박공유 사업자에게는 그만큼 경감된 규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업일수 제한을 집행하지 못하면 숙박공유가 기존 숙박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운데 규제권 밖에서 운영되면서 기존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경쟁, 숙박서비스의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거래량 차별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정보 협조가 필수적이라 보고, 정부는 숙박공유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거래 정보에 대해 접근성이 크고 호스트에 대한 영향력도 강하다는 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일례로 숙박공유 플랫폼을 등록하게 하고, 이들에 대해 플랫폼에서 일어난 거래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김민정·이화령·황순주 2016, 7-8)을 제안한다.

해당 보고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위협이나 사회적 우려에 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한 예로 공유경제는 대개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정형화되지 않은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거래함에 따라 다양한 거래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 우선 높은 정보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해 수요자는 서비스의 질을 가늠하기 어렵고 공급자 또한 수요자를 파악하거나 관찰하는 것이 어려워 거래 상대방이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이어질 수 있다. 공유경제 분야에 따라 자산 손괴, 범죄행위(절도, 성폭력 등), 교통사고, 채무불이행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아울러 거래위험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현 상황에서는 문제 발생 시 보험 처리나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힘들어서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공유경제 플랫폼이 자금 및 정보 이동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신뢰 문제 역시 두드러지게 된다. 공유경제의 확산은 세계적, 시대적 추세로 신규거래 창출 및 경쟁효과, 홍보·시장성 시험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 환경비용 저감효과 등의 다양한 기대효과를 수반한다. 하지만 기존거래 구축, 거래 및 사회적 위험이라는 우려요인 역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는 우려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한다면 사회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민정 2017, 5-6)는 분석을 제시한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의무

부과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은 모든 공유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허위보고의 유인이 낮으므로, 플랫폼이 공급자를 대신하여 거래정보를 상시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유거래 참여자에 대한 등록, 과세 기준 등이 마련되면, 플랫폼이 공급자가 거래 참여 이전에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별 공유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세와 소비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공유 플랫폼은 수익이 플랫폼을 통해 체결되는 거래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거래 참여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거래위험을 감소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고 역설한다. 실제로 리뷰 및 평판, 자체 또는 제3의 검증기관을 활용한 사전심사 등을 통해 공유 플랫폼과 거래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규율하고 거래위험 문제를 크게 완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므로 관련 문제에 있어서 정부 정책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되 거래 참여자보다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김민정 2017, 8)고 제언한다.

이처럼 공유경제의 정책적, 제도적, 산업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성찰적으로 드러내지만 동시에, 상기 보고서들의 관련 사안에 대한 전반적 논조, 틀 짓기 방식, 개별 언술들은 공유경제가 단순한 경제 제도를 넘어 어느새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직면하게 된 불가피한 시대적 조류로 적극적으로 수용, 기획, 추동해야 할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 등 고전적 관점에서의 국가기구나 사회장치로서 이데올로기 개념이 지칭하는 의식조작을 통한 허위의식(false consciousness)의 생성이나 유사한 차원의 담론구성체와 이것이 함의하는 과학주의적, 객관주의적 신화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특정한 인식과 정상성을 자연화하거나 탈쟁론화(decontestation)하는 속성(신진욱 2011, 22)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최근의 담론과 정상성, 이데올로기의 상관관계를 유효적절하

게 드러내 보여준다.

나아가 전술한 바와 같이 공유경제와 관련한 유력한 어휘 및 상징들의 특정한 배열과 이것이 산출하는 의미를 정상화하는 언어적 테크놀로지 중 특정 단어(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자주 쓰기(overwording)’를 맥락에 맞게 변형해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규제나 환경, 생태 등의 어휘군에서 드러난다. 이는 이전 ‘사회적 기업’에 관한 논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착한 경제/기업’, ‘따뜻한 경제/기업’,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기업’ 등과 같은 수사들을 통해 미화되곤 한다. 이는 한국에서 공유경제가 차가운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나 공동체적 연대의 관점에서 대중과 시민사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의 상황을 공감하고, 이들을 도우면서 함께 공존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김주환 2016, 165)됨과 동시에, 이것이 국가주의와 공모한 기업의 변형된 전략적 의도와 연관된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이윤 추구의 논리 등을 은폐하거나 순치시키며 제도 경제 내로 편입 및 확장되고 있는 데에서 발견된다.

구체적인 사례로 숙박공유의 규제에 관한 논의에서 보이듯, 숙박 공유 경제에 관한 규제가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성을 지닌 사회적 논의로 확장되기보다, 숙박공유업자의 영업일수 제한 논의와 집행 등 제도적 장치와 절차적 측면에 머무르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숙박공유가 기존 숙박업(자)과 충돌하거나 과도하게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산업의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좁은 범위의 실제적이며 실용적 제언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인다. 이것이 새로운 경제 형태이자 구성원들의 라이프 스타일, 나아가 문화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성찰적 논의, 또는 ‘타다’와 관련된 논쟁에서 드러나듯 참여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과 갈등에 대한 제도적 조율이나 사회적 합의보다 신(新)산업의 활성화나 경제적 파이(pie)의 확장을 위한 미시적이며 과정적 비판에 국한됨으로써 관련 연구보고서의 인식론적, 실천적 한계를 드러낸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에서도 발간된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정책 제언과 언술들이 발견된다. 일례로 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정책 제언을 통해 이것

이 국정과 도정에 반영되는 정책연구 보고서의 특성상, 관련 개념을 둘러싼 이론과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 분석,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정책제언의 유형을 따른다는 측면에서 관련 보고서들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반면, 각 지자체나 시의 장소성이나 인프라,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강조하는 분야와 유형은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다. 가령, 경기도의 경우 추진 가능한 공유경제 관련 사업으로 교통 공유, 공간 공유, 물품 공유, 정보서비스 공유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도에서 필요한 사업 분야로 차량 공유와 자전거 공유, 주차 공간, 운송 연계 서비스 등 교통 관련 공유경제 모델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숙박 공간, 회의 및 비즈니스 공간, 주거 공간 등을 위해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하여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 분석하고 이를 위해 공공시설의 개방 및 활용을 제안하기도 한다. 공유경제의 특성에 따라, 관심그룹, 핵심기관, 쟁점 등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 진단하며 지자체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언술들도 발견된다. 또한 주요 대상자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 진단하는 데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담론들이 활용된다(성영조 외 2016, 116).

동시에 경기도형 공유경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특성과 연령, 직업에 따라 적절한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공유모델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면서도, 이를 위해 중앙정부, 공유기업, 시군과의 긴밀한 협업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유재 공급자와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더불어 자원을 적게 투자하면서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위에 언급한 정부나 다른 지자체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 제언과 조우하는 지점으로, 이를 지연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자, 미래의 부를 창출할 발전주의적 경제 모델로 자연화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추진 주체들 간 네트워크를 통해 합리적 거버넌스 구성과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지자체의 공유경제 사업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모델로 자리매김(성영조 외 2016, 117)할 수 있으리라 낙관적

으로 진단하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같은 연구원에서 2017년에 발간된 공유경제와 관련한 다른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지자체의 발전주의적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경기도가 친환경 공유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친환경 공유경제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기도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나아가 친환경 공유경제의 중장기 비전 제시 차원에서 공유경제 기본계획에 친환경 공유경제 방안 포함, 또는 별도의 친환경 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 친환경 공유경제 정책 추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유경제과에 ‘친환경공유경제팀’ 신설 및 운영, 친환경 공유경제 성과지표 개발을 통한 기존 공유경제활동의 친환경성 진단, 숙박공유 등 기존 공유경제활동의 환경부담 가중 실태 조사와 개선을 통한 친환경성 실현 증진, 공유경제 업체 간 상호협력과 영세한 업체의 스폰서 협찬 모델 지원을 통한 친환경 공유경제를 활성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 간 친환경 공유경제 활성화 거버넌스 강화, 유희자원 P2P 친환경 공유경제 플랫폼 활성화, 전기차, 자전거,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새로운 친환경 공유경제 모델 발굴, 시범사업의 하나로 판교테크노밸리에 전기차 공유 플랫폼인 가칭, ‘PDrive 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강철구·전소영 2017, 2).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정책 제안으로 공유경제와 친환경 공유경제에 대한 국민 및 기업, 공무원들의 인식제고와 홍보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그 이유로 아직까지 친환경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형성과 공급 시스템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므로 친환경 공유경제의 개념과 장점, 효과를 언론과 관련 세미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친환경 공유경제의 성장잠재력과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강철구·전소영 2017, 118-119)고 주장한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오늘날 새로운 경제 정책과 원리, 또는 제도적 차원을 넘어 사회문화의 영역으로 전면화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담론, 이데올로기, 통치, 주체성 형성, 나아가 사회적 상상의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세계와 공동체, 사회와 타자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구성한다(조영한 2012; Kawai 2009). 그러므로 공유경제 역시 거시적으로는 사회 변동의 한 추동 요소이자 장이며, 미시적으로는 사회와 개인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획하면서 통치하는 새로운 원리로서 다양한 영역과의 관련성 속에서 총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이의 담론적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같은 연구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유 플랫폼 경제의 로드맵과 경기도 발전방향’(2018)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또 다른 연구보고서의 전반적 내용과 언술 구조, 진단과 대안 역시 위의 두 보고서들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이전의 두 보고서가 해당 지자체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란 용어를 제목과 내용에 부각하는 반면, 이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경제라는 시대적 화두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그 귀결점은 역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형태의 장기적 로드맵과 발전방향이라는 점에서 이전 두 보고서와 유사성을 지닌다. 또한 공유경제의 세계적 추세와 관련 사례를 들어 이 경제 모델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과 경기도에 적용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로드맵이나 활용 방안 등의 형식으로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적 관점에서 공유경제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4차 산업형 미래도시의 형태로 연결과 공유를 전제하는 스마트 공유도시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4단계 모델인 데이터화, 정보화, 지능화, 스마트화의 도입을 예로 들고 있다. 한 사례로 공공 데이터 및 민간 클라우드 활용 촉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도시의 가치 확대를 위한 세부 실천 계획으로 스마트 워크 활성화, 산학연 융합연구를 위한 버추얼 유니버시티(가상대학), 경기도 주식회사의 가상 플랫폼화를 추진해야 한다(이민화 외 2018, 3)고 제안한다. 물론 이는 정부나 지자체 보고서의 구조적 특징, 성격, 지향점 등에 비추어 유달리 생경하거나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프랑스 정부는 유럽공동체의 설계자인 장 모네(Jean Monnet)의 현대화 정책 전통을 강화해왔다. 이는 오늘날 유럽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들의 움직임이 되었고,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 또한 이러한 국가적 모네티즘의 전통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특히, 오늘날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 예술 관련 정책의 성패마저 수출입 실적과 GDP 등 가시적이며 계량적 지표로 환원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와 정부의 역량과 효율성을 평가하거나, 국가 및 도시 재개발과 재구조화란 사회경제적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데에서 오늘날 이러한 모네티즘의 패러다임을 비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이영주 2011, 267). 다만 상기한 보고서가 강조하는 스마트 공유도시 및 이를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경제라는 구조 하에서 견인하기 위한 데이터화와 정보화, 지능화와 스마트화라는 기능적이며 시장주의적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 공유경제 모델과 관련 담론은 한쪽을 강조함으로써 인해 다른 쪽, 일례로 고용과 노동, 복지와 소비 등의 선순환, 또는 긴장과 균열, 나아가 이들의 질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공적 숙의와 사회적 담론의 계기를 결핍하거나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는 차원에서 문제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 산하 연구원에서 발간된 공유경제 관련 보고서의 논조와 전반적 담론구성 전략은 전술한 바와 같이 환경이나 생태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거나,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 형태가 야기하는 위험성이나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에 관해 일정 정도의 성찰성에 기반해 우려를 나타내거나 그 파급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술들은 기존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경쟁이나 공유경제 관련 서비스의 질적 하락에 대한 절차적이거나 기능적인 측면의 우려라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바꿔 말해, 이 텍스트들은 기존 자본주의의 축적된 구조적 모순에 대한 급진적 성찰과 이에 근거한 제도적, 문화적 개혁, 혹은 교정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배제된 경제 결정론적이거나 토건국가의 개발주의적 언술들을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이의 결과로 제시되는 거시적 담론구성체는 공유경제를 산업화 시대를 추동한 발전주의 경제모델로 축소하거나 환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유사한 문맥에서 이러한 텍스트와 이에 의해 생성, 확대 재생산되는 사회적 담론들은 과거 관 주도적 경제개발이나 국가주의적 발전주의 모형에

서 벗어나는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새마을 운동 식’ 근대화, 혹은 개발주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트렌드나 유행, 특히 그것이 오늘날 유행하는 혁신이나 생태계를 포함해 일련의 사회적 진보를 약속하거나 암시하는 언술들은 대개 급진적 언설과 연대, 정동의 문화정치의 형태로 촉발되어 일정한 형식을 띤 사회운동과 이의 장기적이며 집합적 실천,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제도화 과정을 거치며 한 사회에 안착하게 된다. 이는 일정 정도의 사회 변화를 전제로 하고 또한 이를 성공적으로 추동하기도 한다. 동시에 이는 예외 없이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초국적이거나 지역적 자본이 국가와의 공모나 결탁을 통해 노동에 대한 물적, 인적, 담론적 통제를 강화하고 세계자본주의 시장에 성공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동기를 공유하며 실제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 V. 나가며

공유경제는 이것이 약속한 장밋빛 미래와 그 전망과는 또 다른 논리와 동력으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사회, 그리고 필연적으로 노동 현장과 일장에서 이를 지탱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플랫폼노동자를 양산한다. 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기술 발전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비용을 수반하는 전통적 고용관계를 벗어나려는 기업의 욕망은 당장 소득이 되는 일거리를 얻으려 길게 줄을 선 노동자와 편리함을 좇는 소비자의 양면 시장을 실시간 중개하는 플랫폼 기술로 실현되고 있다. 이른바 혁신 사업가들은 “이제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거리”라며 향후 ‘일감 노동’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의 미래를 말할 때 우리는 AI(artificial intelligence)로 상징되는 기술이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란 염려와, 기계가 인간을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킬 것이라는 기대의 양극단 사이에서 길을 잃곤 한다. 하지만 그런 논쟁은 지금 노동자의 실제 삶에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미 오래 전 노동의 종말을 예고한 제러미 리프

킨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현실은 두 극단 사이의 어디쯤엔가 있다. 중요한 문제는 변화하는 기술이 노동에 가져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변화이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기존 노동과 복지 제도의 공백이다(손제민 2020).

전술한 바와 같이 플랫폼을 통해 일을 찾는 노동자를 ‘플랫폼 노동자’라 부르는데, 이들은 대부분 근로계약 없이 용역 위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때문에 사회보장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휴일, 산재보상 등과 같은 근로기준법 상 보호 밖에 놓여 있으며,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집합적 통로도 결여되어 있다. 최근 서비스연맹에서 발표한 이동서비스 플랫폼 노동자들(퀵, 대리운전, 배달 서비스)의 실태를 보면 ‘플랫폼 노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과거에 비해 노동조건이 나아지지 않고, 노동 강도는 높아져 대부분 사고 위험성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평균 50세 이상으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일하는 방식도 알고리즘의 은폐된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어 업무의 자율성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내놓는 사업모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고객에게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택시 없는 택시회사(우버), 숙박시설이 없는 숙박업체(에어비엔비), 매장 없는 유통기업(알리바바)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특징인 ‘연결’을 통해 단숨에 세계 굴지의 회사로 올라섰다(이문호 2019).

공유경제는 이처럼 이전 신자유주의의 힐링과 여가, 혹은 멘토링이나 자기계발 담론과 유사한 방식으로 노동의 신성함, 혹은 신산함을 무화하거나 액체화하는 효과를 생성한다. 일례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유하던’ 과거의 형태는 사라지고 이제 이것의 물질성을 불특정 다수가 직접적으로 공유하거나 그 밖에 유무형의 정보나 데이터, 서비스의 형태로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공유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언술들은 이전 자본주의 체제의 무수한 혁신과 진보의 언어가 약속했던 공허함과 유사한 기시감을 준다는 데에서 이러한 기표가 지닌 허구성을 발견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여기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공유한다는 것이 이전에 이를 소유하는 것 정도의 만족감을 주는 것인지, 또한 이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실천은 말 그대로 제한된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사용하는 공유인지, 혹은 이러한 개념에 기댄 또 다른 불평등한 소유와 소비, 물신주의와 구별 짓기의 논리를 양산하는 마케팅과 유사한 자본의 전략적 언어인지 진지하게 탐문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 지점이 새로운 경제와 산업의 모델이 개발, 전파, 확산하는 것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동시에 이것이 노동과 삶,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오늘날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많은 노동의 형태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다. 이러한 노동 형태는 일을 취사선택할 수 있고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시간 활용의 상대적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법적 보호나 사회적 안전망 외부로 내던져진 존재를 노동자로 보기는 난망하다. 노동은 더 작은 단위로 쪼개지고 더 불규칙해지며 일거리 없이 대기하는 시간도 전체 일하는 시간의 3분의 1이나 된다. 보수는 임금 노동자의 70퍼센트 수준이며 이는 사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불하고 노동권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무의 사회성이 떨어지고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기본이다(전병유 2019). 실제로 공유경제의 많은 영역과 업무 형태가 노동자를 노동자로 호명하기 어려울 만큼 그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유라는 언술 이면에 은폐된 공유 자원과 인력의 사용자들이 직면한 보다 시급한 문제는 조직화와 연대의 문제이다. 즉,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상황을 상호 조율된 전략을 채택하는 상황으로 변화시켜 보다 높은 수준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동의 피해를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Ostrom 2010, 86)가 단순한 ‘공유’를 운위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이제 예전처럼 한번 고용되면 평생 복지와 노후까지 보장되는 ‘평생직장’ 혹은 좋은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는 기존의 일자리를 디지털 플랫폼 경제를 통해 외주화하려는 자본의

욕망과 교묘하게 선순환하며 효과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측면을 지닌다. 이제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다양한 실천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등 유사한 담론전략을 활용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경제 형태와 제도, 행위들이 노동과 일자리, 그리고 삶과 사회에 어떤 의미를 투사하는지 진지하게 묻고 답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최초투고일 : 2020. 7. 1

논문심사일 : 2020. 8. 10

게재확정일 : 2020. 9. 10

## 참고문헌

- 강철구·전소영. 2017. 『경기도 친환경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 2017-23. 경기연구원.
- 김민정. 2017.7.11.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KDI Focus, 통권 제83호. 한국개발연구원.
- 김민정·이화령·황순주. 2016.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기대효과와 우려요인 및 정책적 함의』 연구보고서 2016-11. 한국개발연구원.
- 김선기. 2016.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2010년 이후 청년세대담론에 관한 비판적 분석.” 『언론과 사회』 제24권 1호, 5-67.
- 김주환. 2016. “한국에서 사회적기업과 신자유주의 통치: 사회적인 것의 통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통권 제110호, 164-200.
- \_\_\_\_\_. 2017.8.28.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확산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 최근 주요 논란』 KB지식비타민, 17-66호.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 데이비도우, 윌리엄. 2011. 『과잉 연결 시대: 일상이 된 인터넷, 그 이면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김동규 역. 2011. 서울: 수이북스.
- 리프킨, 제러미. 2000. 『소유의 종말』. 이희재 역. 2001. 서울: 민음사.
- 문정우. 2019. “외국어 배우기, 어렵고도 쉬운 길.” 『시스HN』 제606호(5월 2일).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462>(최종검색일: 2020/01/05).
- 바우만, 지그문트. 2000. 『액체근대』. 이일수 역. 2010. 서울: 도서출판 강.
- 바우웬스, 미셸 & 코스타키스, 바실리스. 2014.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 윤자형·황규환 역. 2018. 서울: 갈무리.
- 박상영. 2019. “플랫폼 택시 ‘제도권 안으로.’” 『경향신문』(7월 18일), 1면.
- 박태희. 2019. “[팩트체크] ‘타다’는 공유경제 모델일까, 아닐까?” 『중앙일보』(6월 19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500474>(최종검색일: 2020/01/10).
- 박해광. 2007. “문화연구와 담론 분석.” 『문화와 사회』 통권 2권, 83-116.
- 서동진. 2010.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해부학 혹은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문화과학』 통권 제61호, 37-54.
- 성영조·김군수·김을식·민병길·송승현·한영숙. 2016.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2016-70. 경기연구원.
- 손제민. 2020. 무너지는 일과 삶의 경계... 노동이 녹아내린다. 『경향신문』(1월 1일), 1면.

- 송동욱·이기형. 2017. “불안정한 현실과 대면하는 이 시대 청년들의 삶에 관한 질적인 분석: 삼포세대, 그리고 헬조선이라는 호명에 대한 청년주체들의 체화된 대응과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제84호, 28-98.
- 신지민. 2018. 부업도 ‘공유’하지만 폐업도 속출… 이 ‘착한 경제’라는 환상. 『한겨레』(7월 15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3294.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3294.html)(최종검색일: 2020/01/05).
- 신진욱. 2011.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 사회』 통권 제89호, 10-45.
- 오원석. 2020. “이재용 요청 선 그은 靑 “타다금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없다.” 『중앙일보』(3월 9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725998>(최종검색일: 2020/05/15).
- 유경중. 2018. “도시에 대한 시민의 권리, ‘커먼즈 모델’ 고양에서도 실험해보자.” 『고양신문』(12월 31일).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9464>(최종검색일: 2020/01/05).
- 이광석. 2017. “기술주의의 역사적 반복과 최면 효과.” 『월간 위커즈』(4월 7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2158>(최종검색일: 2019/12/30).
- 이기형. 2006.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14권 3호, 106-145.
- 이문호. 2019. “디지털 자본주의와 노동의 미래.” 금속노조노동연구원 칼럼(12월 31일). [http://www.metallunion.re.kr/bbs/board.php?bo\\_table=B05&wr\\_id=140](http://www.metallunion.re.kr/bbs/board.php?bo_table=B05&wr_id=140)(최종검색일: 2020/01/10).
- 이민화. 2016.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 『이투데이』 칼럼(6월 20일).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45476>(최종검색일: 2019/12/30).
- 이민화·김애선·주강진·김예지·손문영·오지영·윤예지.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유 플랫폼 경제의 로드맵과 경기도 발전방향』 정책연구 2018-17. 경기연구원.
- 이선민·이상길. 2015. “세월호, 국가, 미디어: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세월호 의견기사에 나타난 ‘국가 담론’ 분석.” 『언론과 사회』 제23권 4호, 5-66.
- 이영주. 2011. “거대 문화산업시대의 작은 문화콘텐츠 만들기를 위한 문화정책: 비판적 성찰을 중심으로.” 『작은 문화콘텐츠 만들기』. 파주: 한울아카데미, 230-281.
- 이오현. 2017. “언론의 ‘대학 개혁’ 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이명박 정권 이후

- 대학 정책에 대한 주요 신문의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제82호, 29-72.
- 전병유. 2019. “디지털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하여.” 『한겨레』(6월 13일), 23면 1단.
- 조영한. 2012.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읽기: “국면적인 경제위기를 제안하며.” 『커뮤니케이션이론』 제8권 2호, 22-64.
- 조희정. 2017. 『시민기술, 네트워크 사회의 공유경제와 정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진상훈. 2017. “브래드 템플턴 교수 “차 공유서비스 규제는 ‘큰 실수’ 될 것.” 『조선비즈』(11월 20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0/2017112000609.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0/2017112000609.html)(최종검색일: 2019/08/16).
- 최용성·이경진. 2014. “세계가 열광하는 ‘신개념 셰어링’ 한국만 과거 잣대로 규제.” 『매일경제신문』(8월 11일).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4/08/1086063/>(최종검색일: 2019/08/16).
- 한겨레. 2014. “지역별 특성 살린 ‘공유 생태계’ 구축 활발.” 『한겨레』(12월 30일).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671387.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671387.html)(최종검색일: 2019/08/16).
- 홍성현·류용재. 2013. “무한 경쟁 시대의 글로벌 인재 되기: 글로벌 인재 담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커뮤니케이션이론』 제9권 4호, 4-57.
- Fairclough, N. 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Cambridge: Polity Press.
- \_\_\_\_\_. 1995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critical study of language*. New York: Longman.
- \_\_\_\_\_. 1995b. *Media Discourse*. 이원표 역. 2004. 『대중매체 담화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 \_\_\_\_\_. 2001. *Language and Power* (2nd ed.). London: Longman.
- Fairclough, N. L., & Wodak, R. 1997.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T. A. van Dijk (ed.). *Discourse Studies, A Multidisciplinary Introduction*. London: Sage, 258-284.
- Kawai, Y. 2009. “Neoliberalism, Nationalism,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Critical Analysis of a Japan’s Neoliberal Nationalism Discourse under Globaliz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Vol. 2, No. 1, 16-43.
-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윤홍근·안도경 역.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 Schudson, M. 2011. *The Sociology of News* (2nd ed.). New York, NY: W.

- W. Norton & Company.
- Taylor, C. 2004. *Modern Social Imaginaries*. 이상길 역. 2010. 『근대의 사회적 상상』. 서울: 이음.
- Tonkiss, F. 2012. "Discourse Analysis." In C. Seale (ed.), *Researching Society and Culture* (3rd ed.). London: Sage, 405-423.
- Van Dijk, T. A. 2008. *Discourse and Context: A Sociocognitive App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Wodak, R. 2001. "The Discourse-Historical Approach." In R. Wodak & M. Meyer (eds.),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ondon: Sage, 63-94.
- Wodak, R. & Meyer, M. 2001.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Sage.

## Discursive Politics of the Sharing Economy: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the Government Policy Reports

Ryoo, Woongjae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 | ABSTRACT |

This essay critically examines discursive strategies and politics surrounding the sharing economy in the Korean society recently. This essay analyzes a series of policy reports, focusing on introducing and interpreting how the discourses on the sharing economy create, articulate, or contend a social reality, and also interprets its social impact in a complex and multi-layered way. This kind of work will be useful to explore how a normalized and governing ideology could be conveyed, modified or naturalized in the process of broad discursive formation of certain perspectives in conjunction with the late capitalist society. Also, it will help to imagine and construct a self-reflexivity and an alternative rationality toward such an ideology.

■ **Keywords:** sharing economy, governmentality, policy discourse, discourse politics, critical discourse analysis